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3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음력 10월 6일 kwangju.co.kr

대선, 호남 표심 9대1의 법칙

뉴스초점 – 역대 대선 호남 득표 분석

박빙의 승부땐 호남 표 결집 여부가 여야 승패 좌우
민주, 텃밭서 90%대 압도적 득표하면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 불모지에서 10% 넘기면 정권 교체 가능

내년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두고 진보와 보수 간 진영 대결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면서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호남 민심의 결집 여부가 차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간 '호남 민심 잡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표심 결집 여부로 인해 승패가 갈린 경우가 적지 않아 여야 모두 호남 민심 향배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득표율 2%~3%포인트 안팎으로 승부가 결정된 선거는 모두 세 차례였다. 이들 박빙의 승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에는 항상 호남 표심의 결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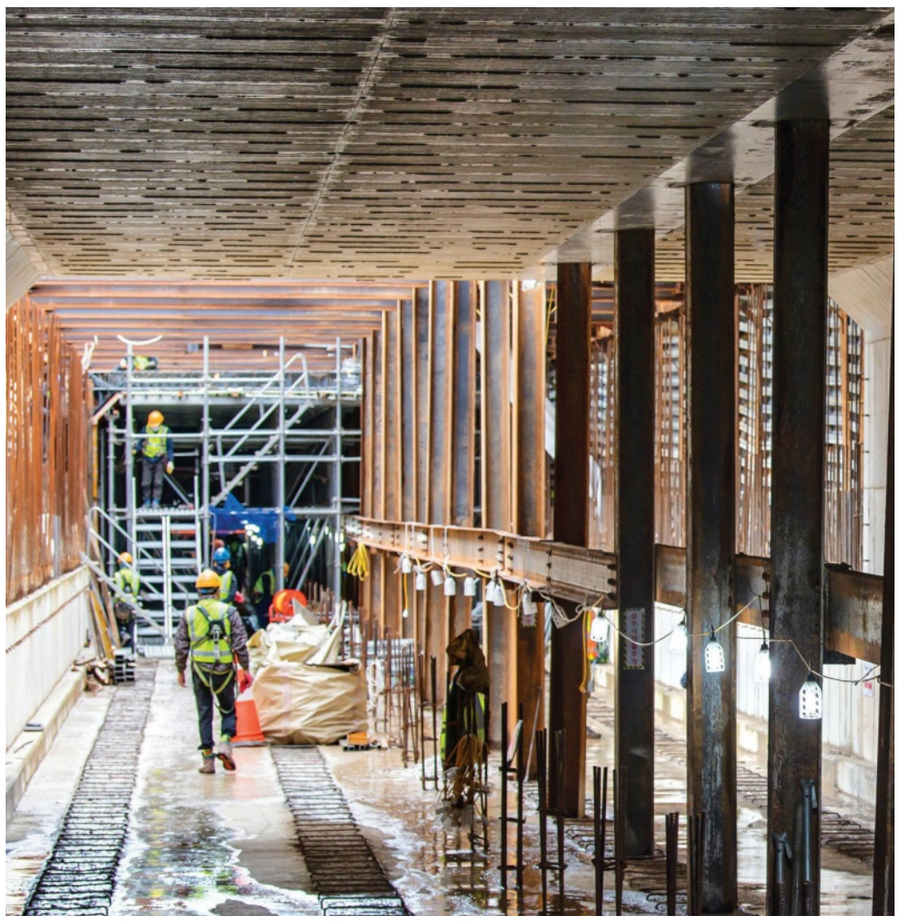
가장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선거는 제15대 대선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27%의 득표율을 얻어 38.74% 득표에 그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1.53%포인트 차이로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수 차이는 39만557표였다. 당시 김대중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었지만, 호남에서 90%이상의 압도적 득표율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97.28%, 전남에서 94.61%, 전북에서 92.28% 등 호남 표심이 결집하면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상대적으로 호남 향우가 많은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광주에서 1.71%, 전남과 전북에서는 3~4%대 저조한 득표율에 그쳤다.

16대 대선에서도 2.33%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91%의 득표율을 기록, 한나라당 이회창(46.58%) 후보를 제쳤다. 노 후보는 당시 광주에서 95.17%, 전남 93.38%, 전북 91.58%의 득표율을 얻으며 호남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앞선 15대 대선때 보다 호남에서 득표율이 오르긴 했지만, 광주 3.57%, 전남 4.62%, 전북 6.19%에 그쳤다.

18대 대선에서도 3.5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55% 득표율로, 48.0%의 득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91.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남과 전북에서는 각각 89.28%, 86.25%의 득표율을 얻었다. 당시 호남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앞선 15·16대 대선에 비해서는 표심 결집이 덜 했다는 평가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최초로 광주에서 7.76%, 전남에서 10%, 전북에서 13.22% 등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표심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고, 호남 표심이 결집하지 않으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호남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표심의 결집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루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10%대의 득표율로 '선방'(善防)하며 정권교체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는 향후 호남 민심의 움직임에 달려있다"면서 "여야와 대선 후보들 모두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과 함께 호남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공약 제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한창 9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3공구 207정거장 공사현장이 공개됐다. 도시철도 2호선 지하공사 현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 25%대인 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0~11일 광주·전남 방문
5·18묘지 참배 '전두환 옹호·개 사과' 사과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대선 후보가 10일과 11일 이틀 간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 광주·전남을 찾는 윤 후보는 광주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누리소통망(SNS) 사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해 온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양 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윤 후보는 10일 오후 2시 화순 도곡면에 소재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과 차담회도 갖는다. 윤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5·18 자유공원을 방문한 뒤 오후 4시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목포로 이동해 1박을 한 뒤 다음날 오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정희식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한 '맞불' 행보로 보인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김해로 이동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으로 민주 성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다. 50여 개 지역 시민·노동·인권·여성·환경·문화단체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을 옹호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5·18의 헌법 전문 포함, 당내 5·18 왜곡 세력 청산,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배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달걀 투척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은 자제하되 5·18묘지 참배단과 열사 묘소를 선점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윤 후보의 일정을 제지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일부 단체는 이날 오후 10시 무렵부터 5·18묘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대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

민주당, 내년 예산안에 반영
1인당 20만~25만원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25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JeollaNamdo
태양·바다·호수의 삼중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SolaSeaDo